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전문가 AHP분석을 통한-

김용호* · 송경수**

<요 약>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 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핵심주제어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AHP 분석

I. 연구배경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혹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 3의 경제주체이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공익적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인 경

논문접수일: 2010년 11월 15일 수정일: 2010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5일

*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 yhkim@cup.ac.kr

** 부산가톨릭대학교 유통경영정보학부 교수 kssong@cup.ac.kr

† 본 논문은 2010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영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된다.(조영복 외,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논의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속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정착시키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지원, 재정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을 갖는데 유용하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의 법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OECD, 1999)¹⁾ 그러나 Dee and Anderson의 영리목적의 사회

1)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반면,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 및 Wallace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등의 표현과 같이(조영복 외, 2009) 공통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확보, 즉 영리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그리고 운영과 이윤의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영국 DTI(2002)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유럽 사회적기업 연구 네트워크(EMES)에서 경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나누어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표1 참조)

<표 1> 사회적기업의 기준(EMES)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활동 수행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 최소한의 유급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이익 추구를 명시적으로 추구 · 자발적 시민 참여 · 자본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의사결정 · 영향자들의 참여적 의사결정 · 제한적 이익분배

자료 : Borzaga and Defourny(2001)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2조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9조에서는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기타)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2 참조).

EU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반면, 유럽은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표 2> 사회적기업의 유형

유형	내용
유형 I: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항구적 일자리형(장애인보호 작업장 등)과 경과적 일자리형으로 구분
유형 II: 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유형 III: 혼합형(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비율이 각각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나 I·II유형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은 유형
유형 IV: 지역사회공헌형(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나,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 수행

자료 : 노동부(2008.11),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2008-2012)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2. 사회적기업의 현황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 2차례, 2008년과 2009년 4차례 그리고 2010년 2차 인증까지 총 353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동 하고 있고(11개 기관은 인증취소 됨) 이중 수도권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표 3 참조)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까지 1,00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숫자와 고용 및 매출비중과 비교해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2006년 55,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체근로자의 5%를 고용하는 한편 총매출액은 270억 파운드에 이른다.(조영복 외, 2007)

<표 3> 연도별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현황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신청기관 수(개)	113	53	54	46	81	104	45	19	57	83	63	71	789
인증기관 수(개)	36	19	30	24	48	64	26	8	17	26	32	34	364
인증취소 수(개)	4	1	1	1	1	3							11
사회적기업 수(개)	32	18	29	23	47	61	26	8	17	26	32	34	353

자료 : 고용노동부 등 자료 정리

3.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의 균형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발전이 제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단기적 생명력을 가진 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립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로서 발전한다는 의미이다.(채중현, 이종한, 2009)

이러한 논의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Wallace(2005)는 여러 의견을 인용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 financial goal),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의 3가지 측면(triple bottom line)에서의 지속가능성 모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재화 또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은 구성원들의 자원확보 및 기업운용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재정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특성으로 상업적 거래활동을 통한 자립과 자율 확보, 기업적·혁신적·위험감수적 행동양식채택,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고 융통성 있는 경영방식, 고객 및 지역사회 중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영, 재정적 목표의 수행과 함께 사회적 목표와(또는) 환경적 목표 수행, 재화와 서비스판매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기반확립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처음 시작하는 초기의 사회적 기업은 수입의 반도 안 되는 부분을 상업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정

도에 머물러 있지만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은 완전한 100퍼센트의 수입을 상업적 활동에서 창출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들로 하여금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전략의 핵심이라 하고 있다(DTI, 2002).

그리고 조영복 등(2007)의 정책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도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책적 관점에서는 상업적 활동을 포함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arraket(2004)는 “지속가능성을 수입을 통한 재정적 자립(financial self-sufficiency)과 동일시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이는 재정적 자립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자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흡수하고 긍정적인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성공의 척도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Bull(2006)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약속(engagement)을 지속가능성의 추가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김용호 외 2009)

Ⅲ. 정부정책과 사회적기업

1. 사회문제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약계층의 고용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이 된 몇 가지 사회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7만 명 정도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경제활동인구 총괄

항 목	1997	1998	1999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실업률 (%)	2.6	7	6.3	4.1	3.1	3.5	3.3	3	3	3.4
고용률 (%)	60.9	56.4	56.7	58.5	60	59.8	59.7	59.8	59.5	58.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문제와 더불어 소득양극화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증대되었고, 전국적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임금근로자는 약 270만 명으로 도시근로자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곽선화, 2009)

둘째, 청년실업문제로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8.1%로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실업률(%)	4.1	3.8	3.1	3.4	3.5	3.5	3.3	3	3	3.4
청년실업률(%) (15-29세)	8.1	7.9	7	8	8.3	8	7.9	7.2	7.2	8.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셋째, 적시고용관행으로 인한 임시·일용직 증가를 들 수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표 6 참조).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임시·일용직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최근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동시장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용성, 2007)

<표 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천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임금근로자	13,659	14,181	14,402	14,894	15,185	15,551	15,970	16,206	16,454
상용근로자	6,714	6,862	7,269	7,625	7,917	8,204	8,620	9,007	9,390
임시근로자	4,726	4,886	5,004	5,082	5,056	5,143	5,172	5,079	5,101
일용근로자	2,218	2,433	2,130	2,188	2,212	2,204	2,178	2,121	1,9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넷째,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고용문제를 들 수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활용문제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상당히 열악하다.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기존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무고용 사업체 22,209기관 중 이행기관은 11,857개소(53.4%), 미 이행기관은 10,352개소(46.6%)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0). 한편 장애인 고용현황이 미흡하나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현상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 맞춤형·특화훈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용자 등의 영향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장애인 구직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구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08년 대비
계	22,209	6,091,555	120,277	114,053	1.87	0.14(증)
정부부문	81	822,749	24,723	16,232	1.97	0.21(증)
공공기관	250	292,086	5,723	6,156	2.11	0.06(증)
민간기업	21,878	4,976,720	89,831	91,665	1.84	0.14(증)

자료 : 고용노동부(2010)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사회·고용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잠재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던 1990년대 말이다. 당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논의하면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는 당시 긴급구호 형태로 저소득 실업자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성격을 규정하였고, 자활사업의 사업내용과 조직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산업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박찬임, 2008).

한편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시장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이어지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이와 관련된 법에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시스템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인증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해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 재정지원(사회서비스제공 기업) 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09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1. 경영지원 등(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	---

	<p>1) 권역별 지원기관 설립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지원기관은 컨소시엄, 협력기관, 프로보노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상시적·지속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지원, 인증 심사지원 및 사회적기업 발굴,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hr/> <p>2) 경영컨설팅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한도 금액 내에서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신청할 경우 노동부는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기간 및 한도금액: 사회적기업은 연간 1천만 원, 3년간 총 2천만 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3백만 원, 3년간 총 5백만 원 지원 <hr/> <p>3) 상용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의 회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용 회계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및 1년 사용비 지원 <hr/> <p>4) 4대보험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해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hr/> <p>5)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마케팅, 회계, 기획, 인사·노무 등의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 15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연차별로 자부담 상향조정 <hr/> <p>6) 사업개발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당해 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전략분야 사업발굴 모델개발 관련 등 사업개발비,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 조사, 브랜드개발, 사업확장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참여자 교육훈련비) - 전국 단위로는 참여자 인건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예산 배정 - 2010년에는 정부·지자체 매칭(8:2)하여 지자체에서 주관함. - 사용불가능 분야: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hr/> <p>7) 프로보노·자원봉사자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법률·회계 등의 전문가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서비스 제공 - 기업, 전문가 협회 등의 전문성 기부활동을 사회적기업 지원과 연계하는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진행
<p>2. 시설비 등의 지원·용자(사회적기업육성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임대보증금 또는 운영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용자 - 최대 4억 원, 연리 2%(2억 원까지) - 5%(2억 원초과), 1년거치

제11조)	4년 분할 상환
3. 공공기관우 선구매(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16개 모든 광역 시·도 조례제정)
4. 조세감면, 재정보험료 지원(법제 13조, 14조)	- 사회적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한 참여자 신규 채용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한 신규 참여자에 대해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지원 (참여자 인건비의 8.5%)
5. 연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법 제16조)	-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게는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까지 전액 손금산입 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07.3.29)
6.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구축	- 6대 분야(돌봄, 지역개발, 로컬푸드, 문화예술, 문화재, 산림) 대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네트워크 구축에 역점 -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및 연구자 네트워크는 '08년에 준하여 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일인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제정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사회적기업가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한 홍보) -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례집 발간 등 전파에 역점 - 다양한 홍보 (TV, 라디오 등 매체 홍보, 사회적기업 로고디자인, 사회적기업 로고송 제작, 홍보대사 위촉 등)
7.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2009년 기준 통합과정 8개 기관, 특화과정 11개 기관 선정)
8. '09 소셜벤처대회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 붐을 조성

자료 : 부산광역시(2010)

IV.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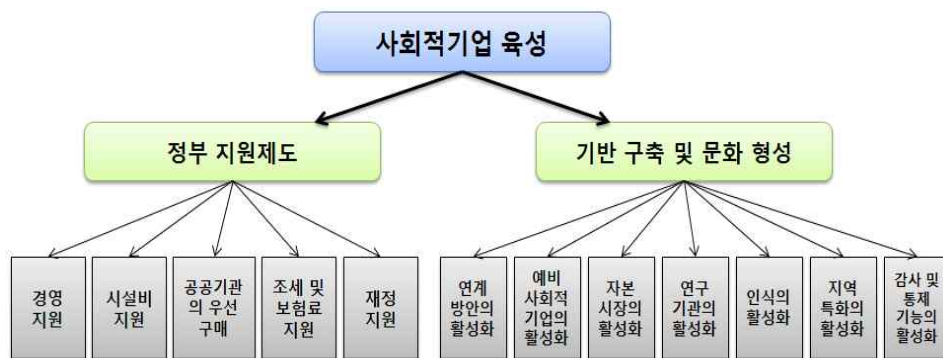
1. 연구방법 및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²⁾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AHP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 가중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AHP분석을 위해 2010년 5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 있는 교수, 사회적기업연구원 연구원, 사회적기업정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전문가 30명에게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최종적으로 2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AHP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크게 두 가지의 영역, 즉 정부지원제도 영역(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 지원) 및 기반구축 및 문화형성 영역(연계방안의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의 활성화, 감사 및 통제기능의 활성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 모델은 <표 8>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근거하여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감사 및 통제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변수를 첨가하여 구성되었고 이들 변수들이 설문지에 이용되었다.



<그림 1> 부산지역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위한 평가 요인

2) AHP 기법은 다속성 의사결정도구로, 특히 집단의사결정 문제 등에 유용한 의사결정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의사결정 문제는 서로 불완전한 정보와 제한된 자원 하에서 목적과 기준에 일치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AHP는 최종적인 목적아래 하위 기준들을 수립하고, 상위 목표의 관점에서 하위 기준을 평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을 AHP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식으로 표현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지표(Social Enterprise Promoting Index: SEPI)로 표현할 수 있으며, SEPI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 가중치가 적용된 점수를 합산함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SEPI = \sum_{i=1}^n W_i \times \text{정부지원제도} + \sum_{i=1}^n W_i \times \text{기반구축 및 문화형성}$$

- 사회적기업 육성방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한 추가분석이 요구됨.
- 계층적 분석과정(Ant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활용하여 각 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음.
- 계층적 분석과정은 수많은 의사결정 요소들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간단한 쌍대비교(1:1비교)를 통하여 산출해 내는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임.

<그림 2>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지표(SEPI)

2. 연구결과 및 분석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와 관련된 구성요소와 기반구축 및 문화형성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한 결과는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항들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0.382)가 월등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시설비지원(0.189), 재정지원(0.155), 경영지원(0.141), 조세 및 보험료 지원(0.132)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가 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그림 3 참조)



<그림 3>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구성요소의 AHP 결과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문화형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역특화의 활성화(0.188), 연계방안의 활성화(0.169),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0.163), 자본시장의 활성화(0.158), 인식의 활성화(0.141), 연구기관의 활성화(0.103), 감사 및 통제기능의 활성화(0.0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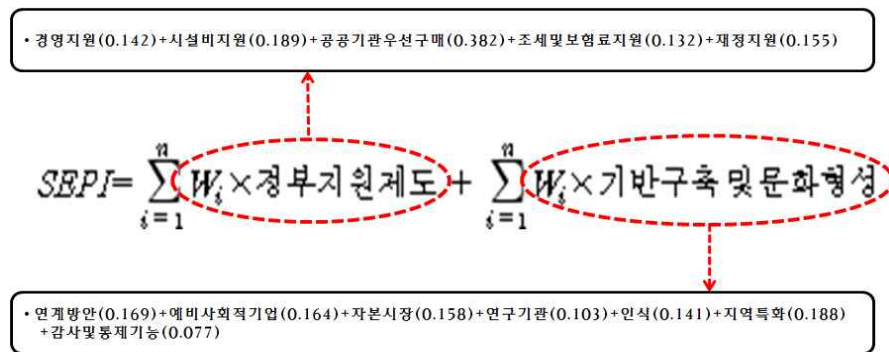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문화 구성요소의 AHP 결과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기반구축 및 문화형성과 관련한 구성요소의 AHP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표 9>와 같고 이러한 결과를 평가모델, 즉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지표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5>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AHP 모델에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정은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의 산출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및 기반구축 및 문화 형성요인 모두가 0.01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평가 구성요소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평가요인		분석결과		
		중요도	순위	일관성지수
정부 지원 제도	경영지원	0.142	4	0.01
	시설비지원	0.189	2	
	공공기관 우선구매	0.382	1	
	조세 및 보험료 지원	0.132	5	
	재정지원	0.155	3	
	합계	1		
기반 구축 및 문화 형성	연계방안의 활성화	0.169	2	0.01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0.164	3	
	자본시장의 활성화	0.158	4	
	연구기관의 활성화	0.103	6	
	인식의 활성화	0.141	5	
	지역특화의 활성화	0.188	1	
	감사 및 통제기능의 활성화	0.077	7	
	합계	1		



<그림 5>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평가 모델

V.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AHP 기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제도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시설비지원, 재정지원, 경영지원, 조세 및 보험료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결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이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12조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초기의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차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의 제품구매와 관련한 제도적 고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건비지원 및 경영지원보다 시설비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사회적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등의 비교적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문화형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그 중요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사 및 통제기능의 활성화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예컨대 서울형, 부산형 사회적기업)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보잉사와 파이어니어 휴먼 서비스즈, 벤 앤 제리와 LSYC(Larkin Street Youth Center), SK와 행복도시락, 교보생명과 다솜이재단, 현대기아차와 안심생활(이은혜, 2008) 등과 같은 연계기업 협력모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부산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현장의 의견과는 상이할 수가 있다. 현장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의 의견이 추가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표본을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도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추가 분석은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우선상황을 더욱 잘 나타내어 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선화(2009), “2008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노동부
2. 고용노동부(2010, 7), 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 김용성(2007, 9),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KDI정책포럼, 제181호
4. 김용호·송경수(2009,6), “사회적기업의 행·재정적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사회적기업연구, 2권 1호, 사회적기업연구원, pp.5-35
5. 노동부(2008. 1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6. 박대석·박상하·고두갑 역(2009), “사회적기업 I”, 시그마프레스
7. 박찬임(2008), “사회적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2008권 7호, 한국노동연구원, pp.31-48
8. 부산광역시(2010),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9. 정병순(2007),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 이은혜(2008),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사례 및 쟁점”, 사회적기업정책연구, 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포럼, pp.1-27
11. 심창학(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61-85.
12. 유병규·김동열(2010. 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과제”, 경제주평 396호, 현대경제연구원
13. 조영복·양용희·김혜원(200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원
14. 조영복·유정란(2009),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6권 2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pp.231-244.
15. 채종현·이종한(2009, 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6. Barraket J.(2004),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What Role for Government? For Department for Victorian Communities”, www. dvc. vic. gov.au/doc/Lit Review Final J Barraket July04.pd
17. Borzaga, C and J. Defourny eds.(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18. Bull Mike(2006), Balance: Unlocking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19. DTI(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London
20. DTI(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London
21. OECD(1999), Social Enterprise, Paris” OECD
22. Wallace Barbra(2005, 3), “Exploring the meaning(s) of sustainability for community based social entrepreneurs”,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 No.1 Issue1, pp.78-89
23. www.sustainability.com/developing-value/what-is-sustainability.asp

Abstract

The AHP Analysis of Critical Factors on Social Enterprise Policy

Kim, Yong-Ho* · Song, Kyung-Soo**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nurture of social enterprises as an important governmental issue in Korea. But because of the social system and the deficiency of experience about social enterprise, the solution of problems included in social enterprise are very difficult. For these reas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critical factors on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For this study 30 experts who work in various fields in Busan about social enterprise was selected and 23 valuable questionnaires was collected. And AHP analysis suggests critical factors(public procurement and partnership with corporation and various organizations) on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When we consider many realistic problems for the social enterprises, just depending on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s highly insufficient fo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Effe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will be a great help to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is sense, results of this study is meaningful to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maker.

Key Words : sustainabilitye, critical factors on social enterprise policy, AHP analysis, public procurement, partnership with corporation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Professor, School of Distribution Management and M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